

데스크 시각

후회하지 않을 후보 뽑기



채희종 사회2부장

한껏 고조됐던 대통령선거 분위기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가라앉고 있다. 호남인은 정권 교체를 확신한 탓인지, 양손에 땀을 뚠 탄자이 오히려 선거 초반보다 미지근해진 듯한 모습이다.

예전에 비해 대선 스트레스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의 일과 중, 최근 출간돼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림책 한 권을 만났다. 프랑스 작가가 쓴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라는 44쪽짜리 그림책이다. 나치 시대 독일 얘기인데 우리의 탄핵 정국에 이은 장미 대선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

1933년 3월, 다섯 살 꼬마 루디는 우연히 아빠와 엄마의 말다툼을 듣게 된다. "잘 생각해 봐, 히틀러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히틀러를 뽑아야 해. 그가 독일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줄 거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을 거예요. 당신한테 나처럼 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공약도 잘 살펴야 하지만

이 그림책은 선거 직전 아빠가 히틀러만이 대안이라며 엄마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얘기를 시작한다. 얼마 뒤 치러진 선거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한다. 국민의 희망과 달리 히틀러는 정당을 해산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한 뒤, 유럽 전역의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다. 전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 와중에 아빠는 군대에 끌려가고, 장어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치 시대가 막을 내린 어느 날이었다. 열두 살이던 루디는 따지듯 묻는다.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

우리는 히틀러를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알고 있다. 하지만 히틀러는 반란이나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다.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는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선거를 거쳐 뽑았음에도

인류 최악의 선택을 한 셈이다. 우리의 지난 18대 대선을 보자. 당시 박근혜 후보는 역대 최고인 51.5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는 직선제 전환 이후 유일한 과반수 득표이며, 어쩌면 앞으로 깨지지 않을 기록일지도 모른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통치 기반을 부여했지만, 대통령이 된 그는 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으로 탄핵이 됐다.

다시 나치 시대로 돌아가 보자. 그렇다면 독일인들은 왜 히틀러를 선택했을까. 히틀러는 자신이 당시 실업에 대한 국민의 공포와 경제 불안을 해소할 책임자임을 내세웠다. 독일인들은 장밋빛 공약에 혹해 후보 검증에 소홀했다.

진정성과 실천 능력 우선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중산층 재건과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 역시 그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검증은 소홀히 했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 전문가와 각종 언론의 조언은 대동소이하

다. 공약을 꼼꼼히 쟁거보고,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청렴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보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발전 공약과 지역 균형발전 공약도 쟁거 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았던 탓에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고 유사하다. 특히 중 소기업, 노인, 청년, 농어민, 군인, 노동자 등 만나는 계층 모두에게 지원을 늘리겠다는 사탕발림식 공약이 많다. 재원 마련 방안도 현실성이 없고, 설사 공약을 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복지 공약을 포기했듯이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아권 중심의 양강 후보 체제에서 호남의 선택은 달라야 한다. 뽑아서 후회하지 않을 후보를 택해야 한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후보보다는 호남의 낙후와 홀대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후보가 더 낫다. 호남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진실성 있는 태도를 지닌 후보, 그에 걸맞은 실천력을 가진 후보여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면, 국민과의 소통 능력과 기본적인 품성이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일 수도 있다. /chaeh@kwangju.co.kr

은편칼럼

고향세 도입, 지금 추진할 때다



옥영석 농협하나로유통팀 팀장

여 기부자에게 담례품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홍길동에게 기부액만큼 소득공제와 환급을 해주고, 세금은 장성군에 이전되는 효과를 낸다. 장성군은 고향세로 교육 및 인재육성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홍길동은 지역특산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가로 구매하는 선순환을 불러온다.

결과적으로 고향세는 농어촌지자체의 세수확보는 물론 농수축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도농간 교류확대, 농어촌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첫해인 2008년 5만건 813억원에 불과했지만 7년만인 2015년에는 750만건, 1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세 도입이 수차례 추진됐다. 2007년 창조한국당이 주민주체 10%를 고향이나 원하는 농촌에 보내자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선실패로 흐지부지 되었고, 이후에도 수차례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로 유야무야 됐다. 출향민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 자치단체간 대립과 과열경쟁 등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주민이 소속된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데, 고향에 기부한 대가로 지방세를 감면받는다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타지역에 납세하고 있는 이가 타지역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 때문에 고향세를 세금이 아닌 기부를 강조하는 교향기부금제로 부르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고심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돕자는 움직임은 고향 담배사주기운동에서부터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공기업직원의 소소지를 옮겨오기, 출향민의 고향 쌀·특산품 사주기운동 등 여러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고향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광주 45.8%, 전남 18.4%로 광역시와 도 분청기준으로는 최저이고, 243개 자치단체 중 100위 이내에 들어가는 곳은 대기업이 들어서 있는 광양, 여수, 광주 3개소에 불과하다. 반면 최하위 10개소 중 5개소는 전남의 기초자치단체가 차지하고 있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75개소 중 23%인 17개소가 광주·전남의 지자체들이라니 안타깝다 못해 애가 탈 노릇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총수입에서 자체수입 비중을 의미하며,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아이가 성장하여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듯, 80%가 넘는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는 자치라는 단어가 무색해진다.

고령화되어가는 농가인구, 정태금지법·수입농축산물로 인한 소비부진과 가격하락, 유례없는 AI 여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극복해나가려면 농업인과 자조단체, 행정의 힘이 어우러져야만 한다. 마침 고향세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도 고향기부제도가 있다니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고향세에 고향기부금이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어차피 내야할 돈 좀 보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중소기업 육성으로 경제에 활력을



김대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익성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부채 수준 등 안정성도 대기업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사회적 갈등의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업종 지정이나 의무고용률 도입 등 각종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동반성장 촉진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아닌 땀질식 처방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화두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정작 대선 이후에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이 크게 피부로 느끼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말은 거창하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기득권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는 경우도 있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한 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안법을 제정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이 법으로 대기업 등이 이득을 얻고 영세의 규제조업자와 중소기업 업체들은 오히려 영업을 접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겉으로는 산업 육성과 같이 바람직해 보이는 가치를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청년기업가, 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이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것이다. 여러 논란 끝에 법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업계는 현실에 맞춰 전안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과 무관한 자가당착적인 정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구호만 있는 대책이 아니라 발뚧부터 언어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다행히 최근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모두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후보들이 모두 중소기업 전담부처 신설을 내걸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지금처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이 아닌 제대로 된 부처로 격상시켜서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이 튼튼해야 한다. 이는 내수확대에도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논의만 활발하였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로의 격상이 이번에는 정부조직개편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대선 주자들의 중소기업 공약들이 모두 실현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대선 후보들의 '문화수도 공약' 지켜보겠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채택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약속했고 국민당 안철수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세계적 창조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권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추진과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을 국책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문 후보는 "아시아문화전당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문화전당에 '예술·기술 융합센터'를 설립해 예술과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의 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안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를 세계적 창조 허브도시로 육성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광주 전역을 '문화벨트화'하는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을 완결해 예술 진흥·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교류 도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광주 미래로 꼽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심각하게 왜곡·축소돼 왔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의 공약은 광주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주문하는 정부 관련 부처 간 지원 협력 체계 구축과 오는 2026년까지 기한이 정해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기간 연장, 정부재원의 안정적 투여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돼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차기 정부에서는 국책 사업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 초·중 통폐합 충분한 논의 거쳐야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이 초·중학교 통폐합을 통해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수시차례의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대상 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러지고 반대 시위가 잇따르는 상황임에도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장 교육감은 최근 확대 간부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통학 여건, 학생 배치 여건 등을 감안해 초·중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동창회 등의 건을 충분히 수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통폐합 장단점, 통폐합 시 새로 구입하는 교복·체육복 지원 방안, 통학 안전 대책과 점단중·전곡중 여학생들에 대한 신실 여고 우선 배정 방안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이후 통폐합 대상 학교를 상대로 한 33차례의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 다음 달 설명

회에서 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노력에도 해당 학교 학부모와 동창회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폐지 대상 학교인 삼정초의 경우 교육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중앙초와 천곡중은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광주시의원들을 대상으로는 최근 확대 간부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통학 여건, 학생 배치 여건 등을 감안해 초·중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동창회 등의 건을 충분히 수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은 통폐합 장단점, 통폐합 시 새로 구입하는 교복·체육복 지원 방안, 통학 안전 대책과 점단중·전곡중 여학생들에 대한 신실 여고 우선 배정 방안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이후 통폐합 대상 학교를 상대로 한 33차례의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 다음 달 설명회

無等鼓

예부터 공무원 월급은 '취조리'에 비유됐다. '취조리'로 유명한 송나라의 도연명은 29세에 관직에 나갔다. 벼슬살이를 한 이유는 가난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집에서 "늙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오랜 굶주림에 시달렸다 보니 쟁기를 던지고 벼슬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현령으로 있던 41세 때 갑할 나온 순찰관에게 관행처럼 뇌물을 바치라는 주위의 권유를 받아 미련 없이

공무원 월급

겨울옷이었다" 박봉은 IMF가 지난 시점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99년 7월 한겨레신문에는 기획예산처가 민간 계약직으로 채용한 팀장들이 출사표를 제출했다며 변호사 출신이 한 팀장의 하소연을 들었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도 문제지만 연봉 3000만 원으로 버티기 힘들었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현실화(?) 된 공무원 월급이 어떤 취조리를 넘어 환유를 받아 미련 없이 관직을 던졌다. 이때 그가 남긴 말이 "취조리만 한 월급 때문에

하리를 곱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뚜미(五斗米)라 해서 월급이 쌀 다섯 되(五斗)였다니 당시에도 박봉은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박봉에 시달렸다. 1965년 7월 동아일보를 보면 공무원 월급이 6000원으로 광부(6400원)와 비슷했다. 1969년 5월 매일경제에는 박봉 때문에 할부 인생을 살아야하는 공무원 신세가 처량할 정도로 묘사돼 있었다. "10년차 모범 공무원 K씨의 4개 월 월부 구두는 창 옆으로 붙어 새기 시작했고 6개월째 입은 양복은 철이 지난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